

4월 국회 대정부질문... 외교·경제 등 현안 많아 '野심만만'

한일회담·김성한 안보실장 교체·근로시간 개편·검수완박 등 산적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여부 뇌관...민주, 장외 투쟁 가능성 시사

4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지만 여야간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 '쌍특검'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등 여론을 흔들 수 있는 첨예한 여야 대치 전선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

우선 정치·외교·통일·안보(3일), 경제(4일), 교육·사회·문화(5일) 등 분야를 나눠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부터 여야는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전망이다.

한일정상회담 결과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외교 참모진 교체 논란, MZ세대 불만을 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결정 등 여야가 충돌할 현안이 많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큰 뇌관으로 여겨진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 대해 당정은 한목소리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이다.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고 같은 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유력하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이 된다면 '강대강'으로 맞붙

는 형국이어서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

민주당도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재의가 아닌 추가 입법을 통해 끝내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관철하겠다고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농민, 국민들과 거부권 저지를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장외 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곡관리법 외에도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 등 의석을 앞세워 입법을 추진 중인 법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미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 등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본회의에 부의됐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여당이 '민주당의 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반대한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이른바 '노란불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여당 반대 속에 일단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민주당 주도로 곧바로 본회의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역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쌍특검'을 두고도 여야가 거세게 맞붙을 게 불 보듯 뻔하다. 민주당은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은 이번 주안에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도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 모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거론하

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을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비판하고 있으며,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 입장 속에 법사위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밖에도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보고된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의 향배, 오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 등도 주요 충돌 지점으로 꼽힌다.

오는 7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새로 선출된다면 점도 변수다. 신임 원내대표가 선명성을 내세우며 한층 강력한 대야(對野) 투쟁에 나선다면 여야의 강 대강 대치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가운데) 대표가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라!

국민 82% "국회의원 비례대표 확대 반대"

행정연구원 국민인식조사

국회가 선거제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국민들이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주의적 정치를 문제로 인식하면서도 선거제도 개혁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정치 양극화와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다당제로 가기 위한 선거제도 변경으로 꼽히는 비례대표의 석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이 82.2%를 차지했다.

31.1%는 '현재 방식(비례대표 의석 비율 15.7%) 유지'를 선호했으며 '비례대표 폐지, 전원 지역구 대표로 선출'에는 27.1%가,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는 24.0%가 동의했다. 반면 '비례대표를 현재보다 조금 더 증원' (9.8%), '비례대표와 지역구 대표를 1대1로' (5.9%) 등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소수였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정의 민주성이 부족하다

는 인식도 62.8%로 높은 수준이었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이었던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55.4%로 절반이 넘었으며 '2인 선거구제로 변경' 23.9%, '3~5인 선거구제로 변경' 18.2% 순이었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소선거구제 유지' 응답이 64.2%로 가장 높았으며, 같은 의견을 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59.8%였다. 무당층은 이 비율이 50.2%로 비교적 낮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1월 15일까지 대면면접으로 이뤄졌다.

개편에 대해서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한가' 문항에 43.5%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55.5%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개헌이 이뤄진다면 어떤 형태의 정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문항에는 69.4%가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스쿨존 시·종점에 노면표시 설치 법안 통과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2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자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안 반영돼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도로의 시점과 종점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해 운전자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식별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상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장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으나

여전히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운전자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부터 종점까지 노면표시를 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0년 7월 23일)했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점과 종점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안이 마련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노동자 권리 퇴행시키는 노동 개악 막겠다"

SNS 메시지 "탁상공론 정치가 국민 삶 위협...변화 만들어 낼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노동자의 권리를 퇴행시키는 노동 개악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책상머리에서 탁상공론하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을의 처지가 어떤지 잘 아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주 69시간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휴가 가라'는 정책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다가왔을까"라며 "요즘 청년들은 권리 의식이 뛰어나서 펜

잡다는 주무 부처 장관의 말은 신박한 탁상공론처럼 들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때론 짧은 온라인 게시물 하나가 국민 삶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곤 한다"며 '한 편의점이 1년에 169명의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을 채용했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게시글 속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1년에 169명의 알바생 채용이 이루어졌을 법하다"며 "업무를 이행할 틈도 없이 2~7분 간격으로 몰아치는 지시사항과 갑작스러운 해

고 통보까지, 우리 사회에는 이런 부조리한 일터가 곳곳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사례이고 노동자에 대해 합당한 처우를 하려 애쓰는 선량한 고용주가 더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청년들이 고용주에 비해 열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께서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거듭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률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